

## [사설]모바일 정보격차도 사회 문제다.

장애인·농어민 등 취약계층의 모바일 정보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정보화 수준조사’에서 일반 국민의 스마트폰117 이용률을 100점으로 놓고 보면 취약계층은 8.3점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990년대 말 인터넷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취약계층의 정보격차는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정보가 돈이 되고, 인간 삶을 윤택하게 하는 ‘지식정보사회’가 열리면서 정보 소외계층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정치·사회·경제적으로 공평한 기회를 누릴 수 없는 불공정한 사회가 연출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는 이 같은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 IT기기 보급지원, 농어촌 정보화마을 구축 등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정책지원을 펼쳐왔다.

그 결과 올해 사회취약계층 정보화 수준은 일반인의 71.1% 수준까지 높아졌다. 지난 2004년 45%에 비하면 정보격차가 상당히 해소됐다.

하지만 지난해 스마트폰 열풍으로 우리 사회의 정보화 패러다임은 모바일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에 접속해 유용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됐다. 또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 워크110’를 펼칠 수 있는가 하면 쇼핑·교육 등도 휴대폰으로 척척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사람이나 기업의 경쟁력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취약계층이 스마트폰으로부터 소외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값비싼 스마트폰을 구매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당장 스마트폰 이용방법이 어려워 이용할 엄두를 못내는 경우도 많다. 정부가 모바일 시대에서도 공정한 사회를 이루려면 인터넷시대의 ‘정보화마을’같은 대규모 정보소외해소 프로젝트를 모바일 분야에서도 적극 발굴하는 지혜를 보여야 한다.